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과제 : 토론*

이 두 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논문은 먼저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녹색성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구체적 목표를 '경제발전도 이루면서 환경가치도 확충하는 녹색성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반성장',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균형 있게 대우하는 지속성장'의 세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의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명확히 밝힌 논문이며,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토론자는 지속가능성장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구조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

이 논문을 토론하는데 있어서 토론자는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그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녹색성장의 목표와 그 실천이 지나치게 당위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녹색성장이 우리 시대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많은 부분 당위적인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정책세미나에서는 당위적인 부분과 함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앞서 밝힌 녹색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동학술행사(2011. 6. 15(수), 롯데호텔 37층 가네트스위트룸),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에서 발표자 이지순 교수의 논문(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임.

우선 녹색성장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환경세의 도입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최소한 단기간에는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성장을 희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동반성장을 이루려는 목표 역시 매우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될 수 있다.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기술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의 도입 역시 대기업이 보다 수용하기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비용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반성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농축산업을 현재와 같이 자본집약적이고 화학비료 중심적인 생산방식에서 노동집약적이고 유기농 기법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산비가 대폭 상승하고 그 생산성마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식량 감산의 문제와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bio-fuel의 사용을 더 이상 부추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옥수수와 같은 곡물들이 식량이 아닌 연료생산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옥수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녹지를 개간하여 옥수수밭을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색성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비용을 초래하며 이러한 비용을 부국과 빈국 사이에 불평등하게 나누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상하기 힘든 비용 및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요지는 녹색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언급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서비스업이 그렇

지는 않지만 관광과 문화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속성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녹색 산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면, 이는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이루는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이러한 산업에 각종 규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및 투자 역시 타 산업에 비하여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환경세 등의 부과를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 이러한 친환경적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그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고용문제가 심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성장잠재력의 훼손과 함께 각종 사회적 질병을 낳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고용창출효과가 막대한 관광 및 문화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웃 나라 중국의 부상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평균 소득과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관광 및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그리고 역사·문화적 인접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고용 창출과 함께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분석과 함께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인 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의 식 (1)에 의하면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인 z 의 지니계수인 $s(z)$ 가 목적함수의 분모에 포함되어 있다. 즉 z 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목적함수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z 는 負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일종의 負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평균값에 해당하는 z 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s(z)$ 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기술적인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필자에 의하면 제1장의 식 (1)의 c 와 z 는 균제상태, 즉 steady state의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종의 균형값들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쿠즈넛츠의 환경 역U자를 설명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z 값이 변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steady state의 균형값 z 와 그 균형값에 도달하기 이전의 z 를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면 한다.

이상의 토론 내용은 본 논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가 느낀 소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신 필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